

“이명박 고발” VS “정치공작” 신당-한나라 사활 건 공방

신당, BBK 의혹 총공세...대선판 다자구도 될 것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BBK 의혹 규명의 키를 쥔 김경준씨의 국내송환 결정을 계기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총력공세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신당 지도부도 1일 BBK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이명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50%대에 못 미치는 이 후보의 ‘철옹성 지지율’을 깨뜨릴 수 있는 결정적 판세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실체적 진실규명의 뭉치 검찰로 넘겨졌지만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지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정 후보측 전략이다.

신당과 정 후보측의 공세는 전방위로 전개될 전망이다. 1일 오전 소집된 선대회 회의는 너나없이 ‘이명박 흔들기’ 공세 속에서 전의가 한껏 고조된 분위기였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나라당 이회창 원로의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며 “한나라당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동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고 응의주도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이명박 후보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회의와 불안이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당 지도부는 이날 BBK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급명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르면 금주 중으로 당 차원에서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후보의 혐의는 주가조작 외에도 돈세탁과 탈세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장에서도 BBK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이날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정 후보측 박영선 의원은 LK뱅크가 당국으로부터 증권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김현미 대변인이 BBK 주가조작 초기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측의 총공세 이번에는 대선 판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는 상황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정 후보측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대선이 다자구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창-박(이회창+박근혜) 연대’,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의 4자 대결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더하면 ‘4+1’ 구도가 될 것이라는 예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 단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 당원들과 화상대화하며 줄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김경준-범여권 빅딜...제 2의 김대업” 역공

한나라당은 1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조만간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범여권의 BBK 연루 의혹 제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 김씨와 범여권의 거래설 및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씨의 귀국 시점이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긴 시기가 될 것이라던 점과 국내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더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에도 굳이 한국행을 택한 점 등은 누군가가 배후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빅딜’을 했을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김씨 귀국의 이면에 범여권과의 정치적 거래 및 사전 기획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씨를 ‘제2의 김대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 후보가 BBK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일방적 진술을 흘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3년이나 송환을 피해온 김경준이 대선 전에 항소를 포기하고 국내로 귀국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귀국하면 10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할 의자

가 들어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2007년 ‘제2의 김대업 사건’이 서서히 막이 오르는데 다행이다”면서 “2002년과 드라마 전개 과정이 유사하니 각본은 동일한 인물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여권 기획설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에 대한 역공을 병행하며 대선 이슈가 BBK 문제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 후보의 장남이 외교와 미국의 사립고를 거쳐 현재 미 스탠퍼드 대학에 재학중인 점을 거론, “정 후보의 96년 재산신고액은 4억1천962만원으로 2001년부터 아들을 조기유학시켰으면 1년 유학비용은 대체로 1억원 이상 드는게 정실인데 그러면 1년에 1억원 정도가 재산에 빠져나갔어야 하나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그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2006년 재산신고내역에는 10억9천9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아들 유학비는 어디서 나왔느냐”며 “국회의원 세비로는 불가능하고 퇴직금 등으로 충당했다는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영기자 jpark@kwangju.co.kr

미 국무부 “김경준 인도, 다른 사건과 똑같이 처리”

미 국무부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 인도 결정에 대해 김씨 사례는 한미간의 조약에 따라 다른 사건과 똑같이 처

리됐다고 강조했다. 손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경준씨 사례는 “기본적으로 한국과의 범죄인 인

도조약에 따라 다른 인도 사건과 똑같이 다뤄졌다”고 강조했다.

맥코맥 대변인은 김경준씨 사건에 대한 국무부의 기본 입장은 “다른 인도 사건과 똑같이 다뤄졌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北 비핵화 과정서 종전 관련 선언 나올수도”

송민순 외교장관 밝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최근 불거진 한반도 종전 관련 선언의 시기 문제와 관련, 북한 비핵화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당사국 정상들이 모종의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비핵화 과정이 진전돼 적절한 단계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 정상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의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합의한다면 그것(정상들의 선언)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들의 선언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 합의는 결국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서 관련국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갖느냐, 즉 ‘핵이 폐기됐다’ 또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폐기됐다’는데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4자 정상간 회담이 현실적이나 아니냐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또 “불능화가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의미있게 진전되면 6자회담에서 합의했던 평화체제 수립문제에 대해 실무선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연내에 외교

장관 또는 6자회담 수석대표 급에서 한반도 종전을 위한 평화체제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최근 일고 있는 종전선언 논란에 대해 “법적·현실적 측면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끝낸다는 의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면서 “법적 의미의 선언과 정치적 의지를 전명하는 것을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또 계속되는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에 대해 “국제비확산·중동정세, 6자회담에 미칠 수 있는 가상적 영향 등 생각해 한·미 간에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시리아 관련 의혹이) 지금 진행중인 6자회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라는 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문제와 관련, “올 연말까지 약속한 불능화의 결과를 보고 유엔 제재 문제도 재검토되리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지금 대략 3개 영역별 핵심에 대해 불능화해야 할 아이템들을 11개 정도 합의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북대화·평화통일 지지”

유엔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제62차 유엔총회는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남북한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총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총회는 한반도 결의안을 오후 회의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해 남북한 대표의 제안실명에 이어 포르투갈(유럽연합 대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24개국의 지지 발언과 사무총장 연설을 들은 뒤 표결 없이 총회 결의로 확정했다.

남북한이 공동발의한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통일’에 대한 결의는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환영, 지지 ▲이번 선언의 총실한 이행 권고 ▲남북 간 대화, 화해 및 통일 과정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지원 요청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 총장은 결의 채택 직후 “정상회담 결과를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환영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면서 “남북한의 이런 노력을 전 세계가 적극 지지 권장토록하는 한편 나름대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광주 온 이인제 “昌 출마 의지는 이명박 의혹 탓”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1일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대선 출마를 거의 굳히고 있는 것은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지역 버스투어에 이어 이날 광주를 방문한 이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총재는 한나라당에서 오랫동안 대표와 후보를 지내 내부 정보에 정통한 분이며, 지금까지 이명박 후보가 보인 행동은 문자 그대로 의혹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이 전 총재는 차떼기 주범이 아닌가. 부정한 대선자금의 최후의 도달자가 누구인가.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과 거기서 거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여론조사 응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동영 후보 외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자신이 유일한 대안임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 발전 공약으로 ▲광주~나주~여수~목포를 연결하는 ‘신경제 대특구’ ▲무안 국제산단단지 개발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10조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상천 대표와 함께 고흥을 방문해 ‘고흥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했으며, 3~4일 해남·보성 방문과 9·13일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당원전대회 참석 등을 통해 호남 민심잡기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시오께?

시원스기타

회 금 대리점

통계특화점 10621221-1700

판매특화점 10621510-7851

일과주거특화점 10621969-5800

출발점 10622527-1575

부동산 자택의 시연화형

高品質 强풍원본서전물건 유전

상업특선

비밀리 주택	12,000
상업 빌딩	15,000
주거용 주택	18,000
사업장(매장)용 주택	20,000
상업 빌딩	23,000
주거용 주택(합계)	24,000